|  |  |  |
| --- | --- | --- |
| **국무원 판공청**  **정확하고 적절한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추진을 위한** **심사비준 진일보 간소화 및 서비스 최적화에 관한 통지**  국판발명전 [2020] 6호  각 성(省), 자치구(自治区), 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당중앙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 업무의 총괄 및 추진에 관한 정책 사항의 관철과 실행, ‘방관복[[1]](#footnote-1)(放管服)’에 관한 심도 있는 개혁, 불합리한 심사비준제도의 폐지, 심사비준사항과 행위의 규범화, 서비스 편의의 제공, 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의 정확하고 적절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호북성, 북경시 이외 지역의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의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1)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심사비준과 조건을 간소화한다. 각 지역은 관할지역 관리책임을 확실히 다지고, 계속하여 법률∙법규에 따라 과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방역업무를 잘 진행하며, 또한 지역∙등급 구분 원칙에 따라 현(县)급 단위로 차별화된 코로나19 방역과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리스크가 낮은 지역은 심사비준 및 비안 등 방식을 취해 가동을 지연시킬 수 없다. 중/고 두 가지 유형의 리스크 지역에 대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방역 요구에 만족하는 기초에 최소, 필수 원칙에 따라 모든 성에 통일된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건을 각각 제정해 발표해야 하며, 확실히 심사비준 및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고, 항목별 처리절차, 서류와 기한을 명시한 리스트 외에 일률적으로 심사비준 실시 또는 증명서 요구를 실시할 수 없으며, 업무가 갈수록 과중되고, 서로가 사전 심사비준 및 되풀이하여 증명하는 등의 현상을 방지한다.  기업으로부터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보증금 등을 수취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중점업종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에 대하여 간단하고 신속한 심시비준 루트(Green Channel)를 마련하여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율을 더욱 빠르게 높인다.  (2)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처리절차를 최적화한다. 관련 지역에서는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원스톱처리, 방문처리, 자동처리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위한 ‘한 번에 접수 및 병행 처리’ 신청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본 행정구역에서 하나의 주도적인 부처를 명확히 하여, 일괄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한 번에 자료를 수취해 관련 부처에서 병행 처리 및 기한내 처리를 끝내며, 원칙상으로는 2 영업일 내 회신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심사비준제도를 비안제도 또는 승낙고지제도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을 잘하여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건에 도달하면 비안정보 또는 승낙서를 제출한 후 즉시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조직이 가능하고, 관련 부처는 사후 현장검사 전개 등을 통하여 기업이 각종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2. 정무서비스 온라인 처리의 강력한 추진**  (3)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등 중점사항 온라인 처리의 실현을 가속화한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코로나19의 방역,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등 전문 서비스를 국가정무서비스 플랫폼과 연결시켜, 기업과 대중들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의 정보 획득,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처리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와 대중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무서비스 사항을 서둘러 정리하고,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솔선하여 실행한다.  현장처리가 확실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 대리 처리, 한 번에 처리를 강력하게 보급하고, 또한 온라인 예비심사, 대기 예약, 우편 송달 등 방식을 채택하여 현장대기와 업무처리 시간을 줄이고, 인원이 집결되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4)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기업혜택 정책 실행을 촉진한다.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 ‘소기업 및 자영업자 서비스 전용란’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각종 정책을 알기 쉽도록 하고, 서비스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관련 기업혜택 정책조치 및 온라인 처리 서비스를 적시에 정리하고,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과 서둘러 연결시켜, 서비스 전용란 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여,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적시에 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 및 장려하고, 효과적으로 정책혜택 부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5)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정무데이터 공유를 서둘러 추진한다. 전국 일체화 정무서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무데이터 공유 수요를 일괄 접수하고, 데이터 공유 절차를 최적화하여, ‘급히 사용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구분하여 추진하며, 일부분이 완성되면, 일부분을 공유’하는 원칙에 따라, 지방과 부처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등 업무에 급히 필요한 정무데이터에 대하여 공유를 가속화하여 추진한다.  **3.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을 위한 서비스 체제 개선**  (6) 기업투자∙생산경영사항의 심사비준 효율을 높인다.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지, 기획, 에너지절감평가, 환경영향평가, 수도, 전기, 가스 연결 등의 심사비준사항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력과 연동을 강화하고,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비준기한을 줄여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심사비준 및 비안 등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현장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온라인이나 화상 등을 통해 프로젝트 평가와 심사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서면자료의 제출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에는 용결(容缺)[[2]](#footnote-2)처리 및 선행처리를 실행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이 종료된 후 서면자료 원본을 추가 제출한다. 코로나19 방역 기간내 만료된 허가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일정기한까지 연장하여 연장, 변경, 갱신 발급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7) 전(全) 산업체인과 협력하여 함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보장을 제공한다. 지역간 연동을 강화하고, 기업을 도와 상∙하위간 협력 등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한다. 핵심 조립(세트) 공급업자 등 산업체인의 중요한 일환이 되는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중점적으로 다잡고, 상∙하위 중소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이끌어 나간다.  지역 중점기업 서비스 보장제도를 구축하도록 장려하고, ‘기업 관리자’, ‘기업서비스 패키지’ 등 조치를 탐색 및 추진하며, 주동적으로 앞장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을 도와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수속을 처리하며, 직원 고용, 원자재 및 자금 등 요인 보장에 특별히 주의한다.  (8)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요구에 호응하는 건전한 체제를 구축한다. 각 지역은 온라인, 전화 핫라인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기업신용회복 체제를 개선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주문을 제때에 인도할 수 없거나 계약기한이 경과되는 등 신용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기업이 신용회복업무를 전개하는데 협조한다.  중소기업 법률지원 그린채널(Green Channel)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을 위해 불가항력 면책 등 법률문제에 관한 지도(指導)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기관이 기업 코로나19 방역 종합보험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하여 보험보장을 제공하며, 배상청구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여 기업의 뒷걱정을 해소한다.  **4. 불합리한 인파, 물류의 관리통제조치 즉각 시정**  (9) 노동자들이 질서 있게 업무복귀를 하는데 방해가 되고 물자 운송의 번거로운 수속을 폐지하고 정리한다. 코로나19 방역 비(非)중점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업무복귀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건강증명서 발급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관련 지역에서는 건강증명서의 지역간 상호 인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노동력 유출지역에서는 성(省) 내에 14일 이상 연속 거주하고, 의심증상이 없으며 또한 격리관찰대상에 속하지 않는(또는 격리관찰이 이미 해제된) 인원들에게 건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유입지역에서는 유출지역(코로나19 방역 비(非)중점지역)의 건강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고, ‘점대점(Point-to-Point)’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착한 인원들에 대하여 격리관찰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빅 데이터 등 기술 수단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서 상호 인정하는 유동인구 건강표준을 마련한다.  유입지역과 유출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점대점(point-to-point), 원스톱’ 직접운송 서비스를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전 과정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고, ‘집 현관문에서 차량문까지, 차량문에서 공장입구까지 ’정확한 이동경로로 움직이고,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은 주변 성(자치구, 직할시)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차량 운전사의 검역 결과에 대해 상호 인정을 추진하며, 주변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이미 검역을 진행하였고 코로나19 방역 중점지역을 경유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과시켜, 중복검사를 줄인다.  **5.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의 코로나19 방역업무에 대한 감독관리서비스 강화**  (10)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이 코로나19 방역 안전조치를 실행하도록 독촉하고 돕는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기업이 <기업/사업단위의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조치 가이드라인> 등 규정을 엄격히 실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며, 방역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고, 또한 빅 데이터 제품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 운용하여 기업의 코로나19 방역 지원 서비스로 사용하고,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기업의 방역상황 보고제도를 마련하여, 적시에 인원들의 건강상황을 추적하고 파악한다.  기업을 도와 방역물자 배치를 조율한다.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과학적이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즉시 진행하여 집중 감염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낮춰야 한다.  각 지역의 각 부처는 조직하여 지도하고 실행 독촉을 강화해 코로나19 방역과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총괄하여 잘 진행하고, 기업의 질서 있는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구체적이고 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19 방역 기간 ‘방관복(放管服)’ 개혁을 더욱 깊은 단계로 진행하고,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경험을 적시에 총괄하여, 일부 우수한 정책과 방법을 규범화, 제도화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적시에 국무원 판공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판공청  2020년 3월 3일 |  | **国务院办公厅**  **关于进一步精简审批优化服务**  **精准稳妥推进企业复工复产的通知**  国办发明电〔2020〕6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为贯彻落实党中央关于统筹推进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的决策部署，深化“放管服”改革，取消不合理审批，规范审批事项和行为，提供便利服务，精准稳妥推进企业复工复产，现就除湖北省、北京市以外地区复工复产有关事项通知如下：  **一、提高复工复产服务便利度**  （一）简化复工复产审批和条件。各地区要压实属地管理责任，继续依法依规、科学有序做好防控工作，并按照分区分级原则，以县域为单位采取差异化防控和复工复产措施。  低风险地区不得采取审批、备案等方式延缓开工。对于中、高风险两类地区，各省（自治区、直辖市）政府要在满足疫情防控要求的基础上，按照最少、必需原则分别制定公布全省统一的复工复产条件，对确有必要的审批和证明事项实行清单管理，逐项列明办理程序、材料和时限，清单之外一律不得实施审批或索要证明，防止出现层层加码、互为前置审批、循环证明等现象。  严禁向企业收取复工复产保证金等。对重点行业企业复工复产可设置审批绿色通道，加快提高复工复产率。  （二）优化复工复产办理流程。相关地区要积极推行复工复产一站式办理、上门办理、自助办理等服务，全面实行企业复工复产申请“一口受理、并行办理”，在本行政区域内明确一家牵头部门，统一受理申请、一次性收取材料，相关部门并行办理、限时办结，原则上要在2个工作日内作出答复。  有条件的地方可将复工复产审批制改为备案制或告知承诺制，企业按规定做好防疫、达到复工复产条件，提交备案信息或承诺书后，即可组织复工复产，相关部门通过开展事后现场核查等，确保企业全面落实各项防疫措施。  **二、大力推行政务服务网上办**  （三）加快实现复工复产等重点事项网上办。各地区各部门要将疫情防控、复工复产等专题服务接入国家政务服务平台，为企业和群众获取疫情防控信息、办理复工复产等提供便利。同时，抓紧梳理一批与企业复工复产、群众生活密切相关的政务服务事项，率先实现全程网办。  对确需现场办理的事项，要大力推行就近办、帮代办、一次办，并采取网上预审、预约排队、邮寄送达等方式，减少现场排队和业务办理时间，最大限度避免人员聚集。  （四）依托线上平台促进惠企政策落地。充分发挥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服务专栏”作用，使各项政策易于知晓、服务事项一站办理。  各地区各部门要及时梳理相关惠企政策措施及网上办事服务，抓紧接入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不断完善服务专栏内容，鼓励引导小微企业和个体工商户及时获取相关服务，有效扩大政策惠及面。  （五）围绕复工复产需求抓紧推动政务数据共享。依托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统一受理政务数据共享需求，优化数据共享流程，按照“急用先行、分批推动，成熟一批、共享一批”的原则，对地方和部门在疫情防控、复工复产等工作中急需的政务数据，加快推动实现共享。  **三、完善为复工复产企业服务机制**  （六）提升企业投资生产经营事项审批效率。对建设项目涉及的用地、规划、能评、环评、水电气接入等审批服务事项，要加强部门协同联动，简化审批流程，压缩审批时限。  凡可通过线上办理的审批、备案等事项不得要求申请人到现场办理，鼓励通过网络、视频等开展项目评估评审，对确需提交纸质材料的可以实行容缺受理、先行办理，待疫情结束后再补交纸质原件。对疫情防控期间到期的许可证，可延期到疫情结束后一定期限内再办理延续、变更、换发等业务。  （七）为推进全产业链协同复工复产提供服务保障。加强跨区域联动，帮助企业协调解决上下游协同等问题。重点抓好核心配套供应商等产业链关键环节企业复工复产，带动上下游中小企业复工复产。  鼓励地方建立重点企业服务保障制度，探索推行“企业管家”、“企业服务包”等举措，主动靠前服务，帮助企业办理复工复产手续，抓好用工、原材料、资金等要素保障。  （八）建立健全企业复工复产诉求响应机制。各地区要依托互联网、电话热线等，及时掌握和解决企业复工复产中遇到的实际困难。完善企业信用修复机制，协助受疫情影响出现订单交付不及时、合同逾期等失信行为的企业开展信用修复工作。  鼓励开设中小企业法律援助绿色通道，就不可抗力免责等法律问题为企业提供服务指导。鼓励保险机构开展企业疫情防控综合保险业务，对复工复产后因发生疫情造成损失的企业提供保险保障，提高理赔服务便利度，消除企业后顾之忧。  **四、及时纠正不合理的人流物流管控措施**  （九）清理取消阻碍劳动力有序返岗和物资运输的繁琐手续。非疫情防控重点地区原则上不得限制返岗务工人员出行。对确需开具健康证明的，相关地区要大力推进健康证明跨省互认，劳动力输出地可对在省内连续居住14天以上、无可疑症状且不属于隔离观察对象（或已解除隔离观察）的人员出具健康证明，输入地对持输出地（非疫情防控重点地区）健康证明、乘坐“点对点”特定交通工具到达的人员，可不再实施隔离观察。运用大数据等技术手段建立各地互认的流动人口健康标准。  加强输入地与输出地对接，鼓励采取“点对点、一站式”直达运输服务，实施全程防疫管控，实现“家门到车门、车门到厂门”精准流动，确保务工人员安全返岗。各省（自治区、直辖市）要加强与周边省（自治区、直辖市）对接，推进货运车辆司乘人员检疫检测结果互认，对在周边省（自治区、直辖市）已经进行检疫检测且未途经疫情防控重点地区的货运车辆快速放行，减少重复检查。  **五、加强对复工复产企业防疫工作的监管服务**  （十）督促和帮助复工复产企业落实防疫安全措施。各地区各部门要督促指导企业严格落实《企事业单位复工复产疫情防控措施指南》等规定，强化防控主体责任，并积极开发运用大数据产品和方案用于支持服务企业防控疫情，建立复工复产企业防疫情况报告制度，及时跟踪掌握人员健康状况。  帮助企业协调调度防疫物资。对出现的感染病例，要第一时间进行科学精准的应急处置，最大限度降低聚集性传染风险。  各地区各部门要加强组织领导和督促落实，统筹做好疫情防控和复工复产，把支持企业有序复工复产各项工作做细做扎实。同时，要及时总结疫情防控期间深化“放管服”改革支持复工复产的典型经验，把一些好的政策和做法规范化、制度化，重要情况及时报送国务院办公厅。  国务院办公厅  2020年3月3日 |

1. ‘방관복(放管服)’에서의 방(放)은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하여,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의미이고, 관(管)은 혁신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공평한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뜻이며, 복(服)은 고(高) 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 정부기능 간소화, 권력이양, 서비스 최적화의 줄임말 [↑](#footnote-ref-1)
2. 용결(容缺): 정해진 기한내 일부 심사자료를 구비되지 않았으나 이 자료가 핵심자료가 아닐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 접수와 심사비준을 시행하고, 추후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예해주는 제도 [↑](#footnote-ref-2)